
2014년 업무계획



국가기록원



|| 목 차 ||

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
| I. 일반 현황 | 1 |
| II. 주요 추진과제 | 7 |
| 1. 국정 핵심인 대통령기록의 관리체계 강화 | 8 |
| 2. 정부 3.0 지원을 위한 공공정보 활용기반 확대 | 9 |
| 3. 공공기록의 체계적 수집 및 효율적 점검·관리 | 10 |
| 4. 전자기록 이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 대응 | 11 |
| 5. 국민 화합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 ... | 12 |

일 반 현 황

1

연 혁

- 1969. 8 : 총무처 소속 정부기록보존소 설치
- 1984. 11 : 부산지소(현, 역사기록관) 설치
- 1998. 7 : 정부대전청사로 본소 이전, 서울사무소(현, 서울기록정보센터) 설치
- 2004. 5 : 국가기록원으로 명칭 변경
- 2007. 12 : 나라기록관(성남) 준공, 대통령기록관 설치
- 2013. 9 : 대전기록관 개관

2

주요 기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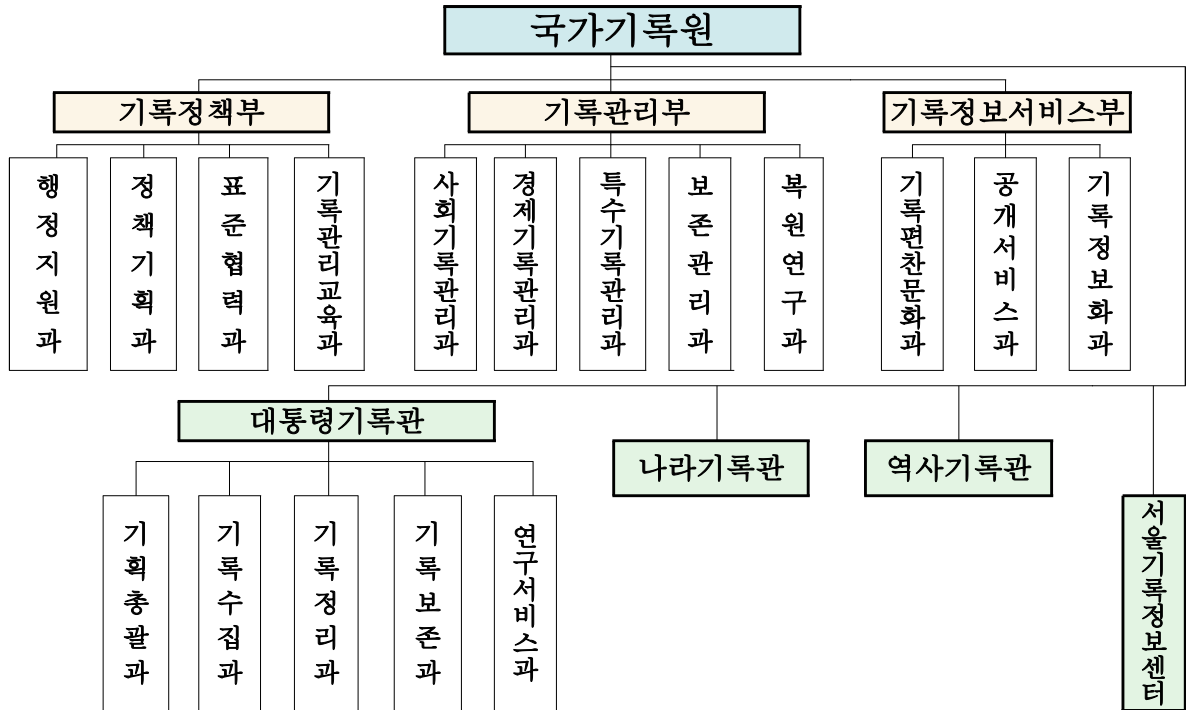
- 기록물관리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제도 개선
- 공공 및 주요 민간·해외 기록물의 수집·보존·평가
- 기록정보자원의 편찬, 콘텐츠 구축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
- 대통령기록물의 보호·보존 및 활용 등 효율적 관리
-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 지도·지원·확인·점검·교육 및 평가

< 국가기록관리 개요 >

- ▶ 국가의 기록관리는 헌법기관별로 별도의 기록물관리기관을 통해 수행
 - 국가기록원은 기록관리 정책 및 법령·제도 총괄
 - ▶ 정부기록물은 보존기간에 따라 각 행정기관과 국가기록원이 보존 분담
 - (보존기간 10년이하) 행정기관이 직접 보존·관리
 - (보존기간 30년이상) 국가기록원으로 이관하여 보존·관리
- ※ 국가기록원으로 매년 20여만권(전체 기록물 생산량의 약 10%) 이관

3

기구 및 인력 : 3부 3관 17과 1센터, 324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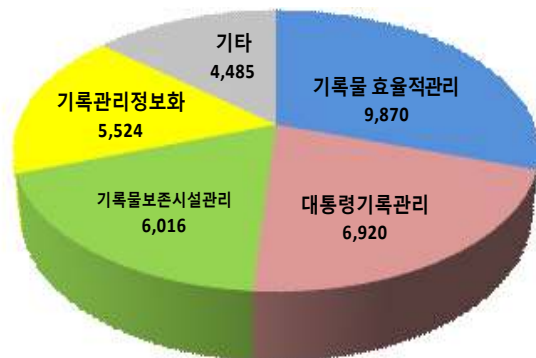


4

'14년 예산 현황 : 521억원

| 구 분 | 예산액 (백만원)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총 계 | 52,151 |
| 인 건 비 | 18,311 |
| 기 본 경 비 | 1,025 |
| 주 요 사 업 비 | 32,815 |

주요 사업비 내역



5

소관 법령 : 법률 2개, 시행령 2개, 시행규칙 1개

- 「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,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
- 「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

6

소장 기록물 현황

(‘13. 12. 31 기준)

○ 4개의 보존서고* 운용, 총 서가길이 349.1km 중 141.4km(40.5%) 사용중

* 나라기록관(성남), 역사기록관(부산), 대전기록관 및 대전본원 서고

< 공공기록물 >

(단위 : 천 / 반올림)

| 연도 내용 | 소장량(누계) | 주요 내역 |
|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문서(권) | 3,371 | 조선, 일제시대, 정부수립이후 문서 등 |
| 도면(권) | 225 | 지적·임야(원)도, 광구도, 기상도, 설계도 등 |
| 카드(권) | 404 | 인사기록, 병적기록, 공무원연금카드 등 |
| 시청각기록물(건) | 2,901 | 사진, 녹음·녹화테이프, 영화필름 등 |
| 행정박물(점) | 61 | 기념우표, 도안, 포스터, 훈장 등 |

< 대통령기록물 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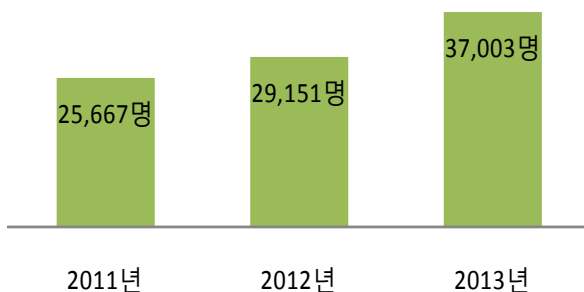
(단위 : 천 / 반올림)

| 합계 (건) | 문서 | | 시청각 (전자+비전자) (장/건) | 행정박물 (선물 포함) (점) |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(건) | 웹기록 (건) | 간행물, 도서 등 (권/개) |
|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| 비전자 (건) | 전자 (건) | | | | | |
| 19,576 | 1,359 | 1,323 | 2,263 | 14 | 3,988 | 10,591 | 38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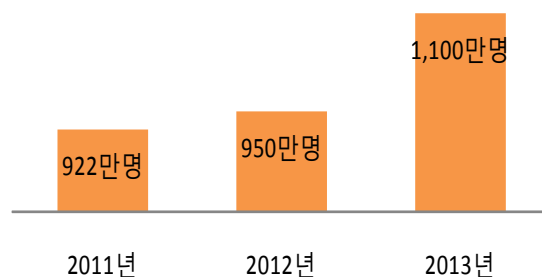
7

방문 및 이용 현황

방문객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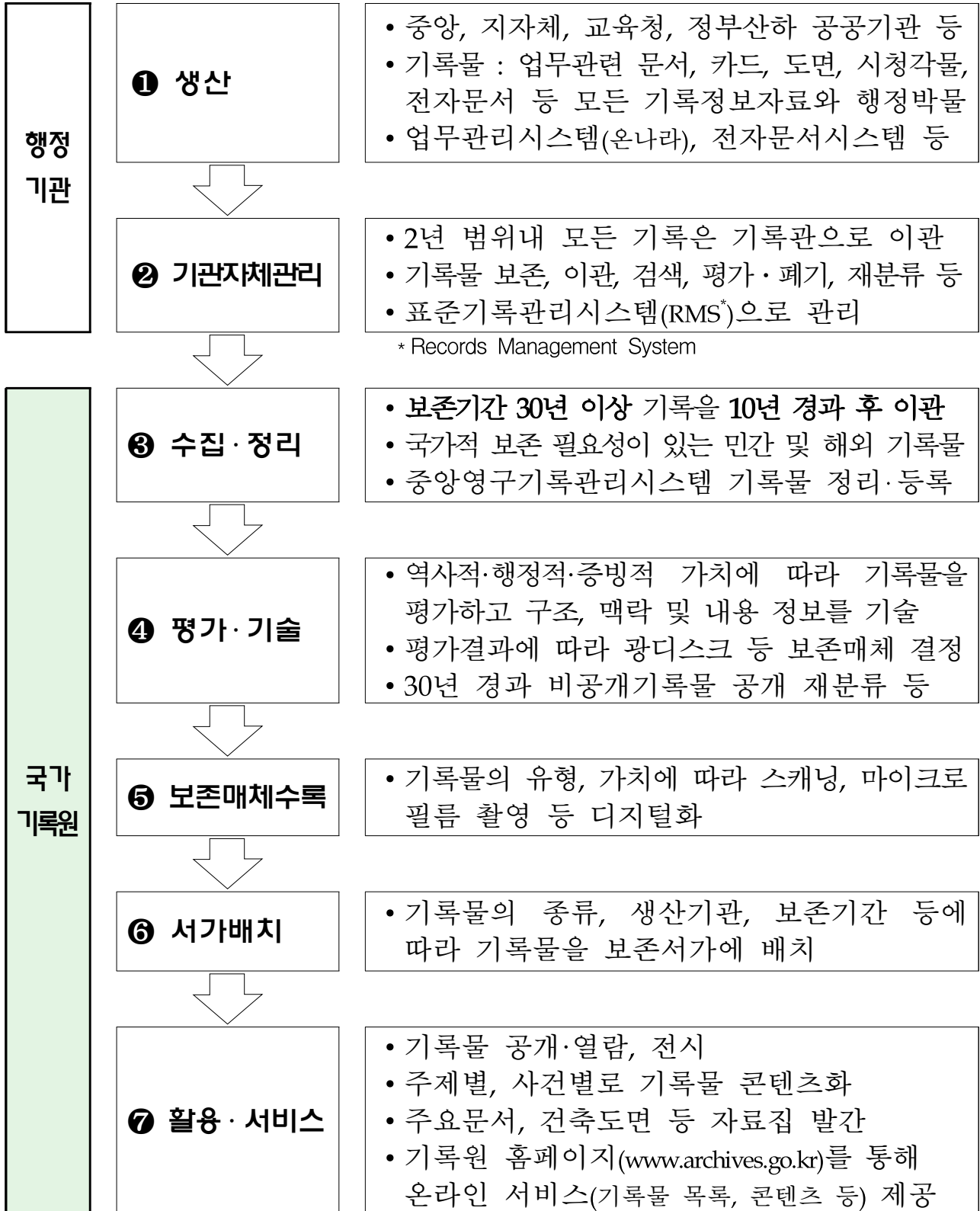


온라인서비스 이용자 현황



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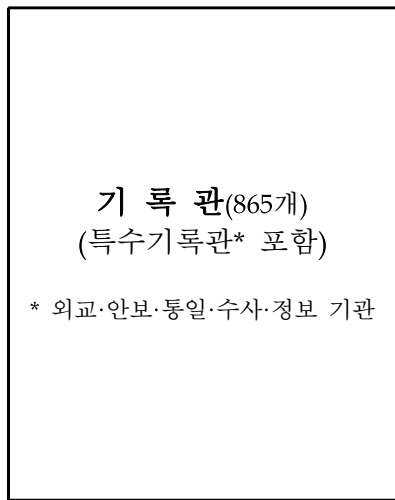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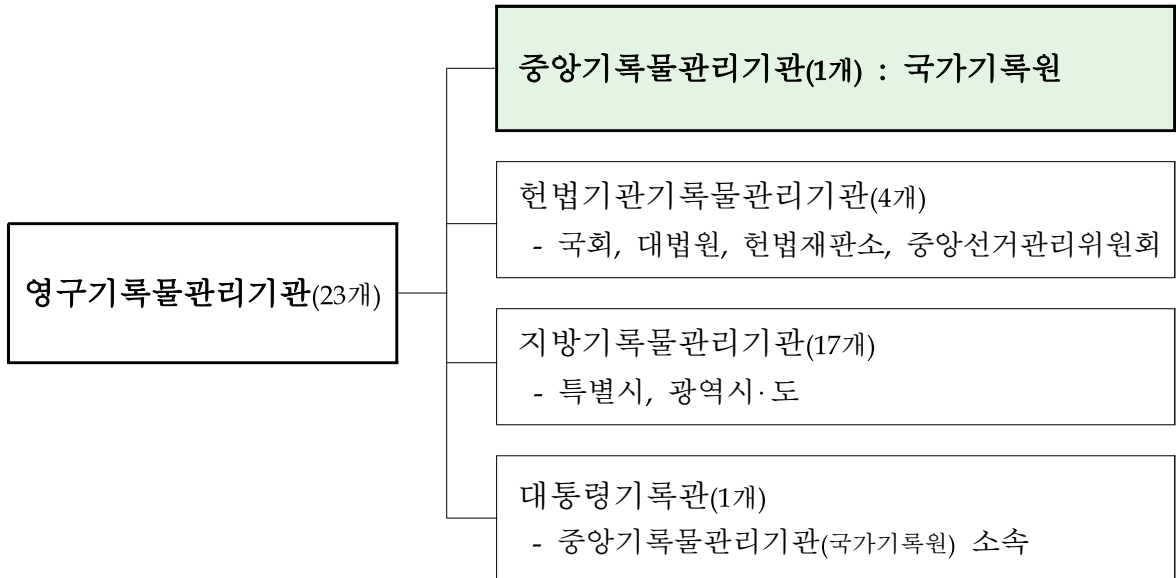
기록관리업무 흐름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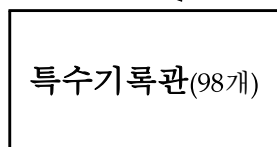
9

기록물관리기관 체계

(‘13. 12. 31 기준)



| 구 분 | 기록관 | 특수 기록관 | 총계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|-----|
| 중앙행정기관 | 39 | 8 | 47 |
| 중앙행정 소속기관 | 81 | 83 | 164 |
| 광역자치단체 | 17 | - | 17 |
| 기초자치단체 | 229 | - | 229 |
| 시·도 및 지역교육청 | 194 | - | 194 |
| 국방부 직속 군기관 | 9 | 4 | 13 |
| 육·해·공군 및 소속군기관 | 108 | 3 | 111 |
| 정부산하 공공기관 | 40 | - | 40 |
| 국·공립대학교 | 50 | - | 50 |
| 기타 | - | - | - |
| 합 계 | 767 | 98 | 865 |



- 중앙행정기관(8개) : 외교부, 국방부, 통일부, 검찰청, 경찰청, 해양경찰청, 방위사업청, 국가정보원
- 중앙행정 소속기관(83개) : 검찰지청(3), 지방경찰청(16), 지방해양경찰청(4)
- 국방부 소속(4개) : 합동참모본부, 기무사령부, 정보사령부, 특수전사령부
- 육·해·공군 본부(3개)

주요 추진과제

과제 1

국정 핵심인 대통령기록의 관리체계 강화

① 대통령 지정·비밀기록물 제도의 내실화 추진

◇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존재여부 논란을 계기로 대통령기록관리제도의 미비점 점검 및 운영 내실화 필요성 대두

- (지정기록물 범위) 지정 범위의 추가 제한보다 운영내실화로 해결
 - 지정 유형 사례 중심으로 세분화된 매뉴얼 제공
- (지정·비밀기록물 관리체계 강화) 지정·비밀기록물 유형별 관리 프로세스 마련, 보안상태 점검 강화
- (공공·대통령기록물 관계) 대통령기록물의 개념 및 관리 범위, 공공 기록물과의 관계 등을 논리적·체계적으로 재정립

② 청와대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의 협업 강화

◇ 제16대 대통령기록물 관리 및 제17대 대통령기록물 이관 과정에서 도출된 제도상 문제점 개선 필요

-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 통보(생산기관 ⇨ 대통령기록관) 내실화
 - 생산현황의 철저한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관리 개선 유도
-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대상 정기 교육 및 컨설팅 강화
 - 대통령기록물 등록·정리 방법, 기록원 이관 등 관련 사항
-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과 대통령기록관의 협의체 구성·운영 추진

과제 2

정부 3.0 지원을 위한 공공정보 활용기반 확대

1 공공기록정보의 통합·활용체계 강화 추진

◇ 정부 3.0 관련시스템(정보공개, 의사소통)과 기록관리시스템간 연계를 강화하고, 생산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기록분류를 실시하여 공개·활용성 제고

- 행정기관 기록물과 기록원 보유 기록물의 통합 검색·활용체계 구축
 - 정보공개시스템 등에 각 기관 RMS(기록관리시스템)의 기록물 제공기능 구현
 - ※ 기능개선 계획 수립('14.3), 기록물 제공기능 개발('14.11), 각 기관 RMS 서비스('15.1~)
- 기록물 생산단계에서부터 체계적 분류가 가능하도록 업무관리시스템 단위과제 신설·변경 절차 개선 추진
 - ※ 각 부처 단위과제를 자체 기록관(운영지원부서)에서 검토·조정, 이력 관리 등이 가능토록 개선

2 비공개기록물의 적극적 공개를 위한 기관 역량 강화

◇ 정부 3.0의 핵심가치인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각급 기관이 보유한 공공정보의 공개 및 활용 기반 강화 필요

- (각급 기관) 정보공개·기록관리 담당자를 대상으로 주기적 연찬회 개최,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적극적인 지도 추진(공공정보정책과와 협업)
 - 비공개기록물 5년 재분류 등 공개 관련 기관평가지표 강화 병행
- (국가기록원) 국민적 관심 및 수요 분석을 통해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의 적극적 공개 및 원문서비스 실시
 - ※ 매년 약 15만권 공개재분류, 원문서비스 확대('13년 350만건 → '14년 530만건)
- (기관간 협업) 기록관리 전문요원 배치·교류를 통한 현장 역량 강화
 - 중앙부처 소속기관 기록연구사 일괄채용(34명) 및 정기적 교육 실시
 - ※ 부처 본부 지자체 배치 완료, 부처 소속기관은 '13년 18%(30명) 배치('14년 34명, '15년 이후 60명 등)
 - 현장과의 소통·협업 확대 등을 위해 인사교류 확대('13년 중앙 → '14년 시도

과제 3

공공기록의 체계적 수집 및 효율적 점검·관리

1 주요 공공기록물의 체계적 수집·관리

◇ 각급 기관이 보유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선별적으로 수집 관리하여 국가 주요 기록물의 온전한 후대 전승 도모

- 중앙부처, 지자체 등의 생산·보유현황 분석을 통한 주요기록물 수집
 - 일반문서류 126천권, 시청각 8.5천건, 정부간행물 25천권, 행정박물 5백점 등
 - ※ 기록물 정리사업으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에 기여(일평균인원 120여명중 취약계층 50%고용)
- 외교·국방·정보 등 특수기록관의 기록물 관리체계 강화
 - 국익관련 비공개는 기관의견 존중, 과도한 비공개·이관 지연 관행은 개선 유도
 - ※ 생산현황, 이관관련 법적 준수사항 지속적 안내,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

2 과거사 분야 기록물의 효율적 관리

◇ 주일 대사관의 과거사 관련 기록 발견을 계기로, 국내·외 각급 기관의 과거사 기록 실태 파악 및 체계적·통합적 관리 필요

- 해외공관, 국내 공공기관 등의 과거사 기록 현황 파악 및 수집*
 - 대일항쟁기조사위 등 유관기관간 기록물 통합·활용체계 구축 방안 마련
 - * 기록관리지침 시행(1월), 현장조사·컨설팅(~3월), 선별 수집·이관(~10월)
- 과거사 관련 민간 소재 중요 기록물 발굴 및 국가지정기록물 지정 확대*
 - *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록 등 현재까지 총 11건의 국가지정기록물 지정·관리

3 각급기관 기록물 폐기 관리체계 점검 및 개선

◇ 세종시·혁신도시 등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보유 기록물이 이전 과정에서 멸실되거나 폐기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 필요

- 쏠 행정기관 대상 기록물 폐기 실태 점검(1월) 및 개선방안 마련
 - 폐기방법 교육·컨설팅, 위탁폐기 시 현장폐기원칙 준수 등의 표준 제정
- 정부산하 공공기관 지방 이전 본격화에 따른 기록관리 지도·지원 강화
 - 기록물 이동 현장 점검, 기록관리 업무 지침 교육·컨설팅 등

과제 4

전자기록 이관 등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 대응

1 전자기록물 본격 이관에 대비, 제도 및 시스템 정비·보강

◇ '15년 전자기록물 본격 이관에 대비, 시스템 개편 등의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체계적인 이관 및 안정적 보존·관리 도모

- 4개 중앙부처 대상으로 실제 운영환경에서 시범이관 실시, 문제점 분석·보완
 - * 계획 수립(1월), 현장점검 및 시스템 개선(3~10월), 시범이관·보완(9월~11월)
- 전자기록생산시스템(온나라 등) 및 기록관리시스템, 데이터규격 등 표준 정비

2 대통령기록관 건립(세종시) 등 기록물의 보존 관리체계 강화

◇ 재난·재해 등의 유사시에도 국가적 주요 기록물의 안전한 전승을 위해 주요기록물의 특화서고 마련 등 보존성 강화 필요

- 적정 예산확보로 대통령기록관의 차질없는 완공 및 이전('15년말) 준비
 - * 금년 46억원 확보, '15년 344억원 확보 필요(시설운영비, 물품구입비 등)
- EMP(전자기파) 공격 등에 대비한 기록원 보존서고 강화 방안 마련
 - 핵심 전자기록물의 경우 별도 출력, 분산 보존하여 비상시 대비

3 전자기록체계, 대전기록관 개관 등 환경변화에 맞는 기능 재설계

◇ 정부 3.0 추진, 전자기록물 본격 이관 등의 대내·외 변화에 대응하여, 기록관리 전문성·효율성 강화를 위한 기능 재편 추진

- 기록관리 전문성·효율성 강화를 위한 전면적 기능 재조정
 - 전자기록관리, 대통령기록물 관리, 수집·정리기술 연계, 복원 등 강화
- 단순 보존 중심의 기록관에서, 권역별 기록관리체제(수집·보존·공개·전사)로 전환
 - * 서울기록관(←나라기록관), 부산기록관(←역사기록관), 대전기록관 등

과제 5

국민 화합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한 기록정보서비스 제공

①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통한 기록콘텐츠 확대 개발

◇ 국민 중심의 기록콘텐츠 기획을 위해 민간부문과의 협업을 강화하고, 시의성 있는 기록정보 발굴 및 서비스 확대를 국민 화합 유도 필요

- 기록관리 프로그램 공동제작 방송사 확대(기존 EBS → 他 지상파·종편 등)
- '기록으로 만나는 대한민국' 등 시대·생활 관련 국민 맞춤형 콘텐츠 개발
 - *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「기록콘텐츠 기획·설계 자문단」 구성, 정기회의 운영
- 월드컵 진출 60주년 기념 전시회(6월~) 등 시의성 있는 기록행사 추진

② 현장 공무원의 역사인식 제고 및 정책설계 역량 지원

◇ 공직부문에 기록문화 및 역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, 각급 기관 공무원이 정책수립에 활용할 수 있는 양질의 기록정보 제공 추진

- 공공기관 대상의 적극적인 기록전시로 역사인식 제고 기회 확대
 - '기록으로 보는 대한민국' 선정(매주), 정부청사 전자게시판 서비스
 - 중앙부처·지자체 대상 찾아가는 기록전시회 개최(기관역사, 주요기능 정책 등 부각)
- 『주요 정책기록 해설집』 발간,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도모
- 정부간행물(약 24만권) 원문서비스 추진 ※ 유형분석·대상선정('14년), 서비스('15년)

③ 국민에 다가가는 체험·공감형 기록프로그램 운영 확대

◇ 국민과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체험형 기록문화 콘텐츠 개발을 확대하고, 학생들의 기록에 대한 흥미와 관심 유발 필요

- 기록사랑 백일장(5월), 기록사랑 이야기 공모전(11월), 나라기록넷띠 운영 등
- '조선왕조실록' 교실 운영,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확대
- 생애기록노트 보급, 지역별 기록사랑마을 지정 등으로 기록문화 확산